

07

문화·통신

1.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☎ 044) 203-2834

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,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,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.
 - ※ 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”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
 - 절대정화구역: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
 - 상대정화구역: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
- 2016년 3월 (잠정) 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관광진흥법 개정 효과



관광진흥법 개정 -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

- 추진배경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 필요
- 주요내용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
- 시행일 2016년 3월(잠정)

2.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

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☎ 044) 203-2643

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박물관·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‘화재·도난 방지시설’만 규정되어 있습니다,
- ‘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’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,
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됩니다.
- 동 개정안 공포(2015년 10월 6일) 이후, 각 지자체를 통해 박물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요건 강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
(참고)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

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내역

- 추진배경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 강화
- 주요내용 ① (개정이전) 박물관·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‘화재·도난 방지시설’만 규정
② (개정이후) 박물관·미술관 등록기준에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추가
- 시 행 일 2015년 4월 7일

1.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

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정 책과 ☎ 02) 2110-1927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(2015년 7월 1일)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·다층화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됨에 따라,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, 기존 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, 새로운 수급자(최대 76만명)들에게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.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(가구당 4인 한도)을 받게 됩니다.
- 아울러,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들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여,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보다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.

(참고) 전자관보 홈페이지 > 관보 제18648호 > 대통령령 제26683호 > 제21조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의 개정

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계획

- 추진배경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
- 주요내용 ·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
·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(가구원 포함): 이동전화 요금감면(가구당 4인 한도)
- 시 행 일 2016년 1월

2.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

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☎ 02) 2110-1935

예기치 않은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
- 그 대상 범위가 데이터서비스만이 규정되어 있고, 음성·문자메시지는 제외되고 있어,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,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음성·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> 뉴스·알림 > 법령정보 > 훈령·예규·고시

요금한도 초과 고지 개정사항

- 추진배경 음성, 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 시 의무 고지 하도록 제도개선
- 주요내용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지 대상범위 확대
-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, 음성·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
- 시 행 일 2016년 6월

3.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

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☎ 02) 2110-1733

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‘고용존’을 신설하고,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연결해줄 계획입니다.

-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새로이 구축되는 ‘고용존’은 고용디딤돌, 사회맞춤형학과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 청년들에게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청년들의 취업 기초체력 강화를 지원할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한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.

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에게는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취·창업을 아우르는 일자리를 전달하고, 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.

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대구혁신센터 출범1주년 성과 및 계획

창조경제혁신센터 ‘고용존’ 주요 기능

- 추진배경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‘허브’ 기능
- 주요내용 ①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‘일자리 중매쟁이’
② 청년들의 지속적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‘취업 트레이너’
③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‘인재 보육기관’
- 시 행 일 2016년 4월

4.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, 질적/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

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과 ☎ 02) 2110-2725

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연구 현장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질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

- 2015년 성과목표·지표 점검을 통하여 평가 대상 사업 중 97%(187개/192개, 2015년 11월 기준) 사업이 논문건수 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, 향후에도 특수한 경우(착수 초기단계 등)를 제외하고는 논문건수 지표 활용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과제 단위까지 질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2014년 12월 「제4차 표준 성과지표」와 2015년 3월 「과제평가 표준지침」에 질적 지표 설정 기준을 제시하여, 과제 평가 시 질적 지표 가중치 비중을 전체지표의 50%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

미래부는 지속적으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여부와 논문 지표 건수 활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서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
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> 뉴스·알람 > 뉴스 > 보도자료 > 미래부,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·지표 점검 실시

질(質)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구축

- 추진배경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, 질적/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
- 주요내용 ①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 지양
② 질적지표 가중치 60% 이상 의무화
③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 50% 이상 의무화
- 시 행 일 2015년부터 매년 적용

5.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

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☎ 02) 2110-1834

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기관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(BMT)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

- 인지도 등에 의한 평가 대신 객관적 BMT 결과를 공공 SW 구매에 반영하여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돕겠습니다.
- 이미 시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,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.
 -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>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검색 >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제13조의2 (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)

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추진 계획

- 추진배경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주요내용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평가가 필요한 제품
 - 국가기관이 직접실시하거나,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
 - 이미 평가시험을 실시한 소프트웨어제품은 해당 결과 활용가능② 시험 및 교정에 관한 국제표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을 시험기관 지정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6.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

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☎ 02) 2110-1834

공공 소프트웨어(SW)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공공 SW사업에서 도급사업자가 과업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었고, 무제한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하였습니다.
 - 2016년부터는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%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,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- 과도한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인력송출을 통해 중간 마진만 챙기는 비정상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,
 -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수급이 활성화되면 중소SW기업이 사업수행의 경험을 축적하여 중견-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(참고) 미래부 홈페이지 > 뉴스·알림 > 뉴스 > 보도자료 > 2016년, 공공SW 참여기업 최대 30%까지 매출이 증가한다.

공공SW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계획

- 추진배경 공공SW사업의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개선
- 주요내용
 - ① 원도급자 하도급 비율 제한(50%), 재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
 - 공공SW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, 예외적으로만 일부 허용
 - 10% 이상 과업을 수행하는 하도급 기업은 컨소시엄으로 공동수급 참여 유도
 - 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'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'으로 전부 개정
- 시 행 일 2015년 12월 31일

7.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

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☎ 02) 2110-2570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(연) 연구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 조성하여 연금급여 지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.

-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,010억원(2016년 100억원)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* 운용재원을 추가로 조성(총 3,010억원)하여 과학기술인연금**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%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*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2013년까지 정부재원으로 2,000억원을 조성하여 원금은 보존하고, 그 운용수익금으로 과학기술 출연(연)에 대해 장려금으로 연봉의 1.02% 지급
 - ** 과학기술인연금 구성 : 국민연금 + 퇴직연금 + 과학기술발전장려금
-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(연)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사학연금 개혁수준을 감안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2.5%에서 4.5%로 확대됩니다.

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> 뉴스·알림 > 보도자료 >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

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자원 확대 계획

- 추진배경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
- 주요내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자원 확대(2015년 2,000억원 → 2016년 2,100억원 → 2018년 3,010억원) 및 개인부담비율 증가(2.5% → 4.5%)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(잠정)

8.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

미래창조과학부 연구안전환경팀 ☎ 02) 2110-2781

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의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‘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’가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는 해당기관의 안전환경관리자의 역할로만 보았으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일정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.
- 동 제도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,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별 위험분석,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,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동 제도가 정착되면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어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> 뉴스·알림 > 법령정보 >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
- 추진배경 연구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
- 주요내용 ① 연구실책임자에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는 책임부여
-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,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,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,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시
②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에 게시
- 시 행 일 2016년 3월 예정

9. 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 지원

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☎ 02) 2110-2374

개인기초연구 지원을 학문분야의 특성과 연구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.

- 2015년까지는 3년 고정, 연도별 5천만/1억/3억원 등 사업별로 획일적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지원해 왔습니다.
- 2016년부터는 과제당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.

구분	2015년	2016년
연구비 / 기간	5천만 / 1억 / 3억 × 3년	1천만 ~ 3억 × 1년 ~ 5년
지원방식	연간연구비 고정 (예: 1억 + 1억 + 1억)	연도별 연구비 자율 설정 (예: 1.5억 + 0.7억 + 0.3억 + 0.5억)
연구관리	연구계획 변경 불가	연구과제 변경 허용 ※ 타당성 평가통과시, 연구내용, 연구비, 연구기간 변경

- 후속연구 등 장기 지원 확대, 중복성 검토* 완화, 2인 공동연구 자율선택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수요에 부응하고, 한우물 파기 연구도 장려할 계획입니다.
- * 같은 주제라도 심화·발전 또는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·지원
- * 동 사항은 2015년 12월말 확정될 「2016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」 최종 반영될 예정이며, 현재까지 연구현장 의견수렴 추진중에 있음
- * 연구현장 의견수렴용 자료는 “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(www.nrf.re.kr) > 재단소식 > 안내사항 > 2016년도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사업 사전설명회 자료 공지”에 게재

10.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

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☎ 02) 2110-2921

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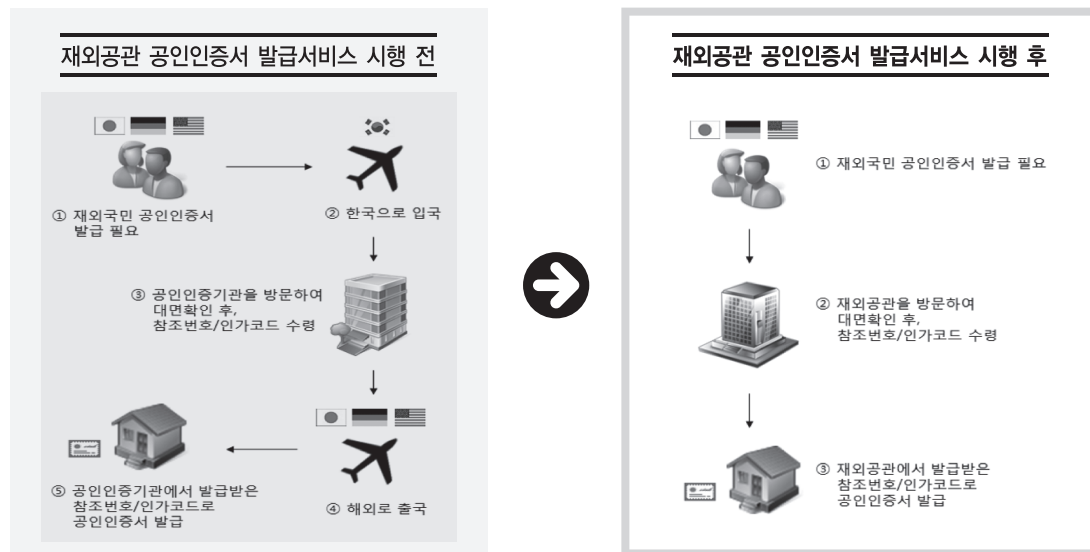
-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정부3.0정책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의 전자민원, 인터넷뱅킹, 온라인증권,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모든 재외공관(162개 공관)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확대 운영합니다.

-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인터넷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2013년 1월 15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여, 2년 간 2,595건(2015년 9월)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.

* 공인인증서 발급 공관 : 7개(2013년 1월 15일) → 42개(2014년 12월 22일) → 162개(2015년 12월 31일)

(참고) *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표

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



11. 부처별 상이한 연구 서식 표준화

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제도과 ☎ 02) 2110-2732

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규정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고,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,

-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종의 연구서식(부처별 26종~84종, 평균 50종)을 연구신청, 계약 등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하여 2015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16년부터 국가R&D 사업 전반에 적용됩니다.

개선 전·후 비교

구분	현행	개선
기본서식	부처에 따라 26개 ~ 84개의 서식 사용	7종의 표준서식으로 통일
첨부서류	부처에 따라 8개 ~ 58개의 서류 사용	첨부서류 9종으로 표준화

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> 뉴스·알림 > 보도자료 > 연구수행 관리서식 표준화

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

- 추진배경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 최소화
- 주요내용 ① 연구서식(부처별 26종 ~ 84종, 평균 50종)을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2. 국가R&D 연구 책임성 확보

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제도과 ☎ 02) 2110-2735

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성실한 연구자까지 매도되고 R&D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

- 이에, 정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하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 -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현재 사용금액의 최대 150%까지 부과하고 있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0%까지로 상향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한 경우에 참여제한 2년이 부과되고, 국가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으로 특허 출원·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됩니다.
 - 참고로, 2015년 8월 24일부터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, 유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여제한 5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.

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 >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국가R&D 연구 책임성 확보

- 추진배경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R&D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
- 주요내용
 - ① 연구비 용도와 사용시 제재부가금 부과율 상향(최대 150% → 최대 450%)
 - ②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명으로 출원·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2년으로 강화
- 시 행 일 2015년 12월 23일

1.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(PIMS, PIPL) 통합 운영

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☎ 02) 2110-1529

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PIMS)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(PIPL)이 2016년 1월부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됩니다.

※ PIMS(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: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2010년 11월 시행)

※ PIPL(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) :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2013년 11월 시행)

- 통합인증제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PIMS)으로 단일화하고 인증마크도 기존의 PIMS 인증마크를 사용합니다.
 - 인증기준은 양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조정하여 단일 체계로 운영하되 유형별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기준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- 또한, 양 인증제의 기존 인증심사원은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증 유효성을 인정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방통위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

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통합 주요 내용

- 추진배경 유사 성격의 개별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
- 주요내용
 -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·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인증기준(86개)을 4가지 적용 유형(공공기관, 대기업, 중소기업, 소상공인)에 차등 적용
 - ②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, NIA(한국정보화진흥원) 간 기능 조정에 따라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 단일 인증기관으로 운영 예정
- 시 행 일 2016년 1월 (잠정, 통합고시안 준비중)

2.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

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☎ 02) 2110-1428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
-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PP(방송채널사용사업자)만을 재난방송 대상으로 하였으나,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(인터넷TV)방송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,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기존에는 재난방송의 개시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,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‘재난방송의 선포’, ‘재난예보·경보의 발령’, ‘민방위경보의 발령’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도록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
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

2016년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

- 추진배경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대상사업자에 지상파, 종편·보도PP(방송채널사용사업자) 외에 SO(종합유선방송국), 위성, IPTV(인터넷TV) 등으로 확대
- 주요내용 기존 69개 의무사업자에서 164개 의무사업자로 확대
- 시 행 일 2016년 6월 (잠정, 개정안 국회 전체회의 통과)*
* 2015년 11월 30일 국회 전체회의 통과

3. 재난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준수사항 마련

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☎ 02) 2110-1428

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, 대피·구조·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,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금지 및 질문과 답변, 회견 등(이하 “인터뷰”라 한다)을 강요금지,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, 오보시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PD(프로듀서),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.

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

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시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준수사항 마련

- 추진배경 재난방송 실시과정에서 방송시간 취재경쟁 및 준칙 준수 확보 방안 미흡으로 오보,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
- 주요내용 ①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
② 대피·구조·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
③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금지 및 질문과 답변, 회견 등 강요 금지
④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
⑤ 오보시 지체 없이 정정방송 실시
- 시 행 일 2016년 6월 (잠정)

1.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

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☎ 042) 481-4970

‘무형문화재 보호제도’가 2016년 3월 28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.

- 먼저 ‘중요무형문화재’가 ‘국가무형문화재’로 명칭 변경되고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‘인간문화재’라는 칭호를 법제화하였습니다.
- 그리고,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유네스코 ‘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’(2003년)의 기준에 맞춰 기능 및 예능에서 전통지식, 생활관습,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로 확대됩니다
- 또한, 도제식 전수교육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그리고, 이수 심사를 문화재청이 직접 실시하고, 전승공예품 인증제·은행제, 전승자 창업·제작·유통 지원, 기술개발 등 무형문화재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

(참고) 문화재청홈페이지 > 새소식 > 보도자료 >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(2015.3.27)

- 주요내용
 - (무형문화재 범위 확대) 기·예능 위주 → 전통지식, 생활관습 등 7개 범주
 - (신규 제도 도입)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, 전수교육대학 운영 등
 - (진흥정책 강화) 전승공예품 인증·은행제, 창업·제작·유통지원, 기술개발 등
- 시 행 일 2016년 3월 28일